

When the State Matches: State-Run Dating Apps and Infrastructural Violence

Injin Woo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August 2026. Please do not cite or circulate without permission.

Commercial dating platforms rank their users; a state-run one would too. These are not the same wrong. When a state-run app embeds demographic objectives in its ranking, it commits a wrong no commercial platform is positioned to commit: commercial ranking disadvantages users, while state ranking demotes citizens. Two claims are at issue, and I defend them separately. Such a ranking is active infrastructural violence, serious and systematic harm produced by design through the organization of an infrastructure. And its wrong is of a kind no firm can commit, since the state wrongs citizens not by abusing its power but by exercising it as designed.

Bouke de Vries (2024) defends state-run dating apps because state incentives align more closely with users' interests. Beckstein and de Vries (2025) extend the defense to social engineering: states may pursue demographic goals such as raising fertility. Their case rests on three claims. Fertility-oriented design serves rather than overrides users' preferences. Liberal states already accept policies bearing unequally on citizens' conceptions of the good. And because the interventions coerce no one, they wrong no one.

The argument has four stages. Drawing on Rodgers and O' Neill (2012), I define infrastructural violence as serious, systematic harm produced through a network's organization, actively by design that regulates populations, passively by omissions that marginalize groups. Following Star and Ruhleder (1996), I ask not what but when something is an infrastructure: dating apps constitute relational infrastructure once they become a principal means of meeting partners. Harm here consists in patterned non-connection, including the status harm of diminished standing.

Third, the claims fail. Beckstein and de Vries concede that algorithms may be skewed toward fertility-promoting matches "even without explicit users' consent" (2025, 9); when the state's objective conflicts with users' sorting preferences, the objective wins. The precedent claim appeals to neutrality of effects, a standard that, as Patten (2012) shows, no liberal treats as a general duty, since even the basic liberties fail it. The applicable standard is neutrality of treatment, which the cited precedents satisfy: child benefits accommodate rival conceptions on equal terms; a fertility weighting does not.

It is the algorithmic counterpart of taxing one conception' s goods at a higher rate than another' s. Against the no-coercion claim, I distinguish undermining a user' s capacity to choose among her options from constituting the option set itself. Critiques of automated influence address the former; mine addresses the latter.

Fourth, the state is the distinctive case. Neutrality of treatment constrains states, not firms, so a commercial platform violates no such requirement. On Kolodny' s (2014) account, social inequality consists partly in some citizens bearing attributes that attract greater consideration than others' . A state that allocates visibility by fertility makes such an attribute consequential by design, exercising a power it is not disposed to refrain from exercising. And as Anderson (1999) argues, what citizenship secures is standing as an equal in civil society. Here the body charged with guaranteeing that standing is the one ranking it.

This is not an argument for privatization: commercial ranking is objectionable on other grounds. Nor is the presumption unrestricted. De Vries' s original proposal survives it, but only conditionally. Its ranking must be objective-free, yet apps cannot help but sort (Kugelberg 2025), and any sorting rule accommodates some conceptions of intimate life over others. And the state must be disposed to refrain from demographic use, a condition disconfirmed by every existing state app and by this literature itself, which moved from neutral instrument to fertility engineering within a year. The concession stands; the class it names may be empty. The paper brings infrastructural violence into the ethics of intimate technology. The question is no longer whether state-run apps can be made abuse-resistant, but whether the state may organize citizens' intimate visibility around collective ends at all.

한국어 번역 (v7)

국가가 매칭할 때: 국가 운영 데이팅 앱과 인프라 폭력

상업 데이팅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순위를 매기며, 국가가 운영하는 앱도 그럴 것이다. 이 둘은 같은 잘못이 아니다. 국가 운영 앱이 인구학적 목표를 순위 시스템에 내장할 때, 그것은 어떤 상업 플랫폼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다. 상업적 순위화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국가의 순위화는 시민의 지위를 격하한다. 여기에는 두 주장이 걸려 있고, 나는 그 둘을 따로 옹호한다. 그런 순위화는 인프라의 조직화를 통해 설계상 산출되는 심각하고 체계적인 해악, 곧 능동적 인프라 폭력이다. 그리고 그 잘못은 기업이 저지를 수 없는 종류인데,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서가 아니라 설계된 그대로 행사함으로써 시민에게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다.

Bouke de Vries(2024)는 국가의 유인이 사용자의 이익에 더 가깝게 정렬된다는 이유로 국가 운영 데이팅 앱을 옹호한다. Beckstein과 de Vries(2025)는 이 옹호를 사회공학으로 확장한다. 국가는 출산율 제고 같은 인구학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변은 세 주장에 기대고 있다. 출산 지향적 설계는 사용자의 선호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선호에 봉사한다. 자유주의 국가는 시민들의 좋은 삶의 관념에 불평등하게 작용하는 정책을 이미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입은 누구도 강제하지 않으므로 누구에게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논증은 네 단계로 전개된다. 먼저 Rodgers와 O' Neill(2012)을 따라 인프라 폭력을 네트워크의 조직화를 통해 산출되는 심각하고 체계적인 해악으로 정의한다. 인구를 조절하는 설계에 의해 능동적으로, 특정 집단을 주변화하는 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발생한다. 이어서 Star와 Ruhleder(1996)를 따라 무엇이 아니라 언제 인프라인가를 묻는다. 데이팅 앱은 파트너를 만나는 주된 수단이 된 시점에 관계 인프라를 구성한다. 여기서의 해악은 패턴화된 비연결로 이루어지며, 격화된 지위라는 지위 해악을 포함한다.

셋째, 세 주장은 실패한다. Beckstein과 de Vries는 알고리즘이 “명시적 사용자 동의 없이도” (2025, 9) 출산 촉진 매칭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인정한다. 국가의 목표가 사용자의 분류 선호와 충돌할 때 이기는 것은 목표다. 선례 주장은 효과의 중립에 호소하는데, Patten(2012)이 보이듯 자유주의자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일반적 의무로 다루지 않는다. 기본적 자유조차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용되어야 할 기준은 대우의 중립이고, 인용된 선례들은 그 기준을 만족한다. 아동수당은 경쟁하는 관념들을 동등한 조건에서 수용하지만, 출산가중치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한 관념이 쓰는 재화에 다른 관념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의 알고리즘적 대응물이다. 무강제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기 선택지들 중에서 고르는 능력을 훼손하는 것과 선택지 집합 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구분한다. 자동화된 영향에 대한 비판은 전자를 다루고, 내 반론은 후자를 다룬다.

넷째, 국가가 특별한 사례다. 대우의 중립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를 제약하므로, 상업 플랫폼은 그런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Kolodny(2014)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은 부분적으로 일부 시민이 타인의 속성보다 더 큰 고려를 끌어내는 속성을 갖는 데서 성립한다. 출산 가능성에 따라 가시성을 배분하는 국가는 그런 속성을 설계로써 유의미하게 만들며, 행사하지 않기로 성향화되어 있지 않은 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Anderson(1999)이 논하듯 시민권이 확보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평등한 자로서의 지위다. 여기서는 그 지위를 보장할 책무를 진 주체가 바로 그 지위에 순위를 매기는 주체다.

이 결론은 민영화 논거가 아니다. 상업적 순위화는 다른 근거에서 반대되어야 한다. 반대 추정이 무제한인 것도 아니다. de Vries의 원래 제안은 이 추정을 견뎌내지만, 오직 조건부로만 견딘다. 그 순위 시스템에는 목표가 없어야 하는데, 앱은 정렬하지 않을 수 없고 (Kugelberg 2025) 어떤 정렬 규칙이든 친밀한 삶에 관한 어떤 관념들을 다른 관념들보다 더 수용한다. 또한 국가는 인구학적 사용을 삼가기로 성향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은 현존하는 모든 국가 앱에서, 그리고 중립적 도구에서 일 년 만에 출산 공학으로 옮겨 간 이 문헌 자체에서 반증된다. 양보는 유지되지만, 그 양보가 가리키는 집합은 비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인프라 폭력을 친밀성 기술의 윤리학으로 들여온다. 중심 물음은 더 이상 국가 운영 앱을 남용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시민의 친밀한 가시성을 집단적 목적 중심으로 조직해도 되는가이다.